

월요광장



최유준 전남대 호남학연구원 교수

세계적 축구 스타 호날두의 '노쇼'(No-Show) 사건이 화제다. 소속 팀인 이탈리아의 명문 축구클럽 유벤투스의 한국 방문 친선경기에서 그가 경기에 나서지 않고 내내 벤치만 지켜 문제가 됐다. 호날두의 노쇼만 문제였던 게 아니다. 한국의 지상파 방송에서 생중계까지 하고 있었던 이 경기는 유벤투스 선수단이 경기장에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예정되었던 경기 시작 시간보다 무려 한 시간 가까이 지연되었다. 어렵사리 경기는 마무리됐지만, 이래저래 모욕감을 느낀 관객들은 현재 티켓 환불 집단소송을 불사할 태세인데 정작 유벤투스나 호날두는 사건 일주일이 지나도록 공식적 사과의 제스처를 취하고 있지 않다.

물론 호날두에 비난의 화살을 집중시

'노쇼'의 정치학과 만남의 예술

키는 것은 운당치 않아 보인다. 프리시즌 기간에 막대한 흥행 수입을 거두기 위해 무리한 친선 경기 일정으로 선수들을 혹사시킨 유벤투스 구단과, 그러한 무리한 일정을 뺀히 알면서도 계약 체결을 강행한 기획사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 순전히 기술적인 문제라면 생각한다면 적정한 위약금이나 환불 등의 조치로 타협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합리적 해결책만으로 보상할 수 없는 감정적 차원이 있다.

'노쇼'는 사람들 사이의 만남과 관련되는 문제이면서 동시에 그 만남의 경제적 이해에 따른 불균등한 권력 관계를 전제하는(속된 말로 '갑질'과 관계되는) 용어다. 호날두에 대해 한국의 팬들이 느낀 환멸은 단순히 '돈'이나 '신용'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그것은 무엇보다 무시당했다는 감정의 문제인 것이다. 여기에는 축구 문화의 맥락에서 '선진-후진', '중심-주변'의 정치적-논리도 한 암묵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사건 직후 호날두가 자신의 SNS에서 보여 준 무신경한 태도는 한국 팬들의 감정을 더욱 악화시켰다. 비슷한 시기 북페스티벌 참여를 위해 내한하여 '노쇼'는

란을 일으킨 영국의 팝가수 앤마리의 행보는 이 점에서 대조적이라고 평가된다. 폭우와 강풍 등 기상악화에 따른 무대 안전 문제로 공연 취소 사태가 발생했고 행사 주최 측과 앤마리의 매니저 측 사이의 책임 공방이 이루어질 즈음, 앤마리는 직접 자신의 SNS로 한국의 팬들에게 사과와 유감의 뜻을 표명한 데 이어 자비로 호텔 라운지를 대여해 즉흥 라이브 콘서트를 열었다. 이 콘서트 실황은 SNS를 통해 생중계되기도 했다.

스포츠 이벤트를 포함한 넓은 의미의 공연 문화는 그 핵심이 '만남의 예술'이라는 점이다. 공연이나 이벤트를 통한 국제적 만남과 글로벌 문화 교류가 잦아지면서 민족주의나 지역주의적 감정이 약화되거나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직접적 만남과 대면의 순간들이 특수한 '장소'를 부각시키고 그 장소에서 형성된 고유의 문화와 해당 지역민들의 집단적 감정에 대한 이해를 요청한다. 공연 당사자들이나 매니저와 기획사 등 공연 관계자들이 세심하게 고려해야 할 점이다.

지난달 9일 전국 순회공연 일정의 하나로 광주 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되었

던 '이건음악회' 시리즈는 이 점에서 특별히 기할 만하다. 올해로 30주년을 맞은 '이건음악회'는 세계적 수준의 연주자들을 한국에 초청해 무료 콘서트를 갖도록 하는 기업 메세나 프로그램이다. 주최 측은 지난 30년간 일관되게 초청 연주자들에게 한 가지 조건을 제시해 왔는데, 공연 양곡프로그램으로 반드시 그 연주 팀의 편성에 특화된 '아리랑' 편곡 연주를 하라는 것이었다. '아리랑'이라는 곡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연주자들에게 공연이 이루어지는 장소에 대한 배려와 존중을 요청한 것이다. 이 연주회 시리즈가 청중과 연주자들 양쪽 모두의 지지를 얻으며 30년을 통틀어 온 비결 가운데 하나다.

호날두의 노쇼와 같은 사태는 수도권과 지역의 문화적 불평등 관계를 배경으로 한국 내에서도 유사한 방식으로 재연될 수 있다. 수도권 중앙 무대에서 활약하는 스타와 셀럽, 유명 연주자들은 어떠한 태도로 지역을 방문할까? 그것은 많은 부분 기획 단계에서 좌우된다. 장소의 특수성을 고려하면서 수평적 만남을 이끄는 상호 배려와 감정적 조율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시대다.

법조칼럼

가정 폭력 대응 방안 및 관련 제도



김성진 변호사

최근 외국 출신 이주 여성인 아내를 폭행한 남편의 사건이 보도되어 많은 비난을 사고 있다. 가정 폭력은 그 이유를 불문하고 용납될 수 없다. 피해자가 가정 폭력을 용인하면 자칫 가해 행위가 반복되거나 그 정도가 심해질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관련 제도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다.

가정 폭력을 방지하기 위해 가정 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가정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제정되어 시행 중이다.

이 법률에서 말하는 '가정 폭력'은 가정 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여기서 '가정 구성원'은 동거 친족을 비롯하여 현재 또는 과거의 배우자 및 그와 관련된 직계 존비속 등을 두루 포함하는 개념이다.

그리고 '가정 폭력'에는 신체적인 폭력만이 아니라, 경멸하는 말투로 모욕하는 정서적인 학대, 가정 구성원의 재산을 가로채어 임의로 사용하거나 혹은 허락 없이는 금전을 일질 사용하거나 가정 폭력 범죄를 위한 경제적 위협 등의 행위도 해당될 수 있다.

가정 폭력 대응 방안 또는 피해자 보호에 관한 제도를 살펴보면, 수사 기관에 대한 신고 또는 고소, 수사 기관이 법원에 청구하는 가정 폭력 범죄의 재발 방지를 위한 임시 조치, 피해자가 법원에 청구하는 가정 폭력 피해자 보호 명령, 형사 처벌과 구별되는 가정 보호 사건에 대한 보호 처분 결정, 가사 소송과 연관된 접근 금지 등의 사전 처분, 피해자 배상 명령 등이 있다.

먼저 피해자는 가정 폭력 발생 시 이를 수사 기관에 신고하거나 고소할 수 있다. 신고 받은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가정 폭력이 진행 중이거나 그 직후라고 판단되면 조사를 권고하고 유형력 행사 후 가택에 진입할 수 있다. 더 나아가 가해자를 형사 처벌 할 수 있고, 만일 피해자가 가해자의 형사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에는 형사 사건이 아닌 가정 보호 사건으로 송치하거나, 피해자는 법원에 피해자 보호 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법원에

로부터 피해자 보호 명령을 받기 위해서는 앞서 폭행을 신고한 내역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 한편 형사소송법상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을 고소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가정 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고소에 관한 특례를 규정해 이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

다음으로 가정 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검사는 직권 또는 경찰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임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임시 조치는 가해자를 피해자의 주거로부터 퇴거하게 하여 격리하거나, 피해자의 주거 및 직장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을 금지하거나, 전화 또는 이메일 등을 통한 접근을 금지하거나, 가해자를 의료 기관에 위탁 또는 유치장 등에 유치하게 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피해자는 법원에 피해자 보호 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가정 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피해자 보호 명령은 위 임시 조치와 그 내용이 유사하지만 피해자가 법원에 청구한다는 점과 법원에서 심리를 거쳐 결정하므로 임시 조치에 비해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이 다르다. 단 법원은 사안에 따라 피해자 보호 명령을 청구 후부터 결정 시까지 임시 보호 명령을 내릴 수 있다. 피해자 보호 명령을 통해서 친권자가 가정 폭력

가해자일 경우에는 그의 친권 행사를 제할 수도 있다. 또한 피해자 보호 명령은 기본적으로 2개월간 유지되고 최장 6개월까지 유지될 수 있고, 기간 연장이나 조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라도 총 2년에 한정된다.

또한 피해자가 배우자와 이혼 등 가사 소송을 앞두고거나 소송 중이라면, 가정법원으로부터 접근 금지 등의 사전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가정 보호 사건은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해 형사 처벌을 받게 할 의사가 없지만 폭행이 재발할 우려가 있고 가해자의 교정이 필요한 경우에 가정법원을 통해 보호 처분을 받게 하는 것을 말한다. 보호 처분은 접근 행위의 제한, 친권 행사의 제한, 사회 봉사 및 수강 명령, 보호 관찰, 치료·감호 위탁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가해자에 부과된 벌금 등의 형사 처벌 책임이 피해자에게 전가되는 것을 막고, 처벌 목적보다 가해자의 성행 교정에 중점을 둔 제도라 할 수 있다.

피해자는 피해자 배상 명령을 통해 치료비와 부양료 등 민사적인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다. 피해자는 별도의 민사 소송으로 손해의 배상을 구할 필요 없이, 피해자의 고소로 진행된 가정 보호 사건 내에서 손해를 전보받을 수 있다.

가미카제(新風) 경제 폭력



송오식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광주고등법원 시민사법위원회장

제2차 세계 대전 말기, 일본은 전세가 불리해지자 기성천외의 방법으로 국면 전환을 꾀하고자 전쟁사에서 보기 드문 '가미카제'를 고안해 낸다. 즉 유인 비행기 미군의 전함을 폭격하는 것이다. 전투기와 함께 조종사도 사망하지만 적군에게는 더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발상에서 비롯된 방식이다. 일본은 이러한 무식한 가미카제 방식을 한국과의 무역에 적용하고 있다. 반도체 등 전자 제품 핵심 소재의 수출을 규제하게 되면 일본 기업에도 피해가 가지만 한국 경제에는 치명타를 줄 수 있다는 계산 하에 세계 경제 질서의 기조인 자유 무역과 공정 무역의 틀을 깨면서까지 감행하였고, 이는 일종의 경제 '선전 포고'라고 할 수 있다.

이제 경제 전쟁이 시작되었으니 국가

지도자와 기술 전문 관료, 산업체와 국민 모두가 지혜를 모아 슬기롭게 난관을 극복하는 과제에 주어졌다. 아베는 이번 수출 규제와 백색 국가 제외가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행해진 것이라는 말을 되풀이 하지만 일본의 치졸한 행태가 일본 식민지 강점 시대 징용 노동자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은 다른 나라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에 일본은 대법원의 강제 징용 배상 판결에 대해 극도의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일까. 일본 정부는 징용 피해자 등에 대한 배상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당시 한국 측에 제공된 5억 달러 상당의 유·무상 경제 협력을 통하여 모두 해결되었기 때문에, 대법원의 판결은 국제법 위반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더 나아가 일본은 현재까지도 위안부, 강제 징용 등 불법 행위 사실 자체를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다.

2012년 대법원은 강제 징용 피해자가 신일본체절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 배상 청구 소송에서 "외교 협정으로 개인 청구권이 소멸할 수 없다"는 취지로 1심과 2심에서 신일본체절이 승소한 판결을 파기 환송하여 배상의 여지를 남겨놓았다. 이 판결은 양승태 대법원장과 박근혜 청와대 사이

에서 '사법 거러'의 대상이 되면서 판결이 늦추어졌다가 2018년 10월에야 무려 40여 페이지에 걸친 장문의 판결문으로 그 논리를 제시하면서 '배상'으로 확정되었다.

청구권 협정의 골자는 "일본은 한국에 10년에 걸쳐 무상 3억 달러와 유상 2억 달러를 제공한다"(제1조)와 양국과 그 국민의 재산·권리 및 이익과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을 확인한다"(제2조)이다. 같은 판결에 참여한 대법관 13명 중 2명을 제외하곤 다수 견해는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 지배 및 침략 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인 불법 행위를 전제로 하는 강제 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이라는 점을 명시하고, '한일 청구권 협정은 일본의 불법적 식민 지배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협상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근거하여 한일 점도 그 배경으로 짚고 있다.

일본이 자해적 공격 성향을 보이는 극단적 태도의 배경에는 몇 가지가 있다고 본다. 첫째, 강제 징용 피해자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정확하게 일본의 '불법적' 식민 지배라는 점을 명시하여 일본이 그동안 항변하여 온 일본 식민 지배의 절

차적 정당성과 합법성 주장을 정면으로 무참하게 깨트리고 있고, 일본이란 국가와 일본 기업의 이미지를 실추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둘째, 이번 판결이 일본 기업에 대한 몇몇 소수의 위자료의 배상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일본 식민 지배 시대를 청산하려던 위안부, 강제 징용자 뿐만 아니라 당시 피해를 입은 사람들 모두가 만개 개인적으로 위자료를 청구하면 배상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불몰처럼 소송이 제기될 것을 염려한 것이다. 물론 북한과는 아직 우리와 같은 청구권 협정조차도 체결한 적이 없기 때문에 만약 북한과 협상이 나신다면 그 금액은 천문학적 숫자일 수도 있다.

셋째, 일본은 그동안 '잃어버린 10년'을 포함하여 오랫동안 경제 침체에 빠지면서 국력이 쇠퇴하고 있는데 한국은 전자 산업과 자동차, 조선 등에서 일본을 추월하면서, 쫓기는 자로서 심리적 압박감을 느끼고 더 이상 추월당하지 않겠다는 전략이라고 본다. 더군다나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통하여 통일 한국의 큰 그림이 그려지고 있는데, 통일 한국에 대해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비장한 각오가 그 배경에 깔려 있다고 본다.

社說

이젠 마스터즈대회 광주 저력 다시 보여 주자

지구촌 수명 동호인들의 대축제인 '2019 광주 세계마스터즈수영선수권대회'가 오늘 개막해 14일간의 장정에 돌입한다. 마스터즈대회는 세계 각국의 국가 대표선수들이 참여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수영선수권대회와 달리 각국의 수영 동호인들이 실력을 겨루며 친목과 화합을 다지는 자리다.

오는 18일까지 경영, 다이빙, 수구, 아티스틱 수영, 오픈 워터 수영 등 5개 종목 59개 세부 경기가 펼쳐진다. 모든 경기를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서 인기를 모았던 하이다이빙은 위험도가 높아 제외됐다.

대회에는 전 세계 84개국에서 선수 4032명, 코치 201명, 미디어 392명, 국제수영연맹 관계자 153명 등 모두 5672명이 참가한다. 국내에서도 110개 동호회에서 1034명이 출전한다. 아마추어 대회인 만큼 항공, 숙박, 참가비 등은 자비 부담이다. 참가자 중 2000여 명은 광산

구의 선수촌에 예약을 했고, 나머지는 게스트하우스나 호텔 등에 머물 예정이어서 지역 숙박업계는 밀려드는 예약에 모처럼 특수를 누리고 있다고 한다.

경기는 동호인 행사인 점을 고려해 질서 유지에 중점을 두고 최소한의 출입만 통제한다. 따라서 운영 인력도 절반 이하로 축소된다. 하지만 연일 기승을 부리고 있는 폭염으로 인한 피해나 지난번 클럽 붕괴와 같은 돌발 안전사고가 재연되지 않도록 안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지난달 세계수영대회는 자원 봉사자와 시민 서포터즈를 비롯한 지역민들이 각 분야에서 헌신한 덕분에 성공 대회로 평가받을 수 있었다. 이번에도 성숙한 시민 의식과 광주의 저력을 다시 한 번 보여 주어야 한다. 아울러 마스터즈 참가자들은 가족·친구 등과 함께 참여하는 경우가 많다 하니 그들에게 광주 맛과 멋, 광주 정신을 적극 알려 도시 브랜드를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광양항 글로벌 물류기지 도약 절호의 기회다

정부의 '제2차 신항만건설 기본계획'이 최근 발표했다. 이번 계획에는 광양항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아시아의 로테르담'으로 육성하는 내용이 담겼다. 네덜란드 로테르담항은 컨테이너 물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현재 에너지화물 유치, 스마트화, 지능화, 친환경 등의 대응으로 유럽 물류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전국 12개 신항만에 대한 중장기 개발 계획을 담은 '제2차 신항만건설 기본계획'(2019~2040)은 항만의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 정부가 마련한 최상위급 계획이다. 계획에 따르면 광양항은 재철·석유 화학산업 지원 및 자동차·컨테이너 화물 처리, 해운·항만 물류 연구개발(R&D) 등에 최적화된 항만으로 개발하게 되며 총 7조3000억원(재정 1조3000억원, 민자 6조 원)이 투입된다.

또 인근에 제조·물류 기업이 입주하는 1115만㎡의 배후부지를 공급하고 석유·철재·목재 등의 화물전용 부두 조성, 배

후단지 전력용량 확대 등을 통해 국내 최대 산업 클러스터 항만으로 발전시킨다는 것이다.

이번 계획이 더욱 반가운 것은 지금까지 광양항의 숙원사업이 모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과거 정부 투자에서 소외됐던 광양항이 산업·R&D·고부가가치 물류가 집적화된 세계적인 클러스터 항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정부가 부신항 신앙을 동북아 메가 포트로, 광양항은 아시아의 로테르담 모델로 개발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면서, 그동안 흔들렸던 광양항의 위상도 보다 확고해졌다.

특히 정부의 이번 발표로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광양항의 제2도약이 실질적으로 가능해졌다. 이 때문에 여수선단 내 대기업들도 일제히 환경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아무쪼록 개항 33년 만에 광양항이 한 단계 더 도약해 글로벌 물류기지로 성장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잘 살려 나가야 할 것이다.

無等鼓

중국 계림의 이강 인근에서는 예로부터 '가마우지 낚시'가 성행했다. 가마우지는 물새의 한 종류로, 부리의 끝이 구부러져 있고 발가락 사이에 물갈퀴가 있어 헤엄을 잘 친다. 낚시꾼들은 가마우지의 이런 특징을 이용해 고기를 잡는다.

우려했던 대로 일본은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우대국인 '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김현중 국가안보실 제2차장은 브리핑을 통해 "우리의 수출이 증가할수록 일본으로부터 핵심 소재와 부품 수입이 증

다. 반도체를 비롯한 핵심 소재의 일본 의존도가 높은 탓에 수출이 증가할수록 적자가 나는 구조인 것이다. 지난해 대일 무역적자가 240억 달러를 기록한 것만 봐도 우리 경제의 취약성을 알 수 있다.

혹자들은 이번 일본의 경제 침략을 '2019 가해임란(己亥後亂)'이라고 말한다. 400년 전 임란 당시 국토를 유린하고 민초들의 삶을 무참히 짓밟았던 야만적 행태가 오늘의 경제 침략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턱밑까지 쫓아온 한국을 견제해야 한다는 초조감과 자국의

'가마우지 경제'

가하는 가마우지 경제 체제에서 이제는 탈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를 가마우지로, 일본에서 부품을 수입해 가공해 수출하는 우리 제품을 가마우지가 물고 있는 물고기에 비유했다.

실제로 '가마우지 경제'란 말은 1989년 고무로 나오키라는 일본 경제평론가가 '한국의 붕괴'라는 책에서 처음 언급했다. 당시 수출품의 핵심 부품 대부분이 일본 제품이다 보니 실익은 다 일본이 가져갔다. 지금의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

한다는 초조감과 자국의 우익 세력을 결집하기 위한 정치적 속셈이 맞물린 결과라는 것이다.

일본의 경제 침략은 장기간에 걸쳐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일본은 민주당 폭력 때도 선전포고 없이 공격을 감행할 만큼 비열한 전략을 서슴지 않는다. 상대가 싸움을 걸어 온 이상, 회피하거나 무작정 감내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이번 경제 보복을 우리의 소재부품 산업 발전을 위한 절호의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저들의 '잃어버린 20년'이 어쩌면 '가마우지 경제'로 전환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 주자.

/ 박석천 문화부 부장 skypark@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기사 자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체육부 220-0633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예향부 220-0692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52	사건부 220-0694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42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